

# 선진국의 노동교육으로 본 민주주의의 완성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몇 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시스템을 부러워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부모들의 교육열도 대단하고, 공부를 위한 학생들의 자기희생도 놀랍다. 초등학생은 중학교 과목을 배우고, 중학생은 고등학교 과목을 학습한다. 부모들은 살림살이를 아껴서 학원비를 낸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도 그렇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떤가. 절대다수의 학생들이 몇몇 직업만을 선호하여 경쟁을 위한 경쟁을 하고 있다. 전문직이나 대기업 직원 또는 공무원이 되면 정상적인 사회인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패자가 된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차별이 직업선택을 매우 기형적으로 만들고 있다. 잘나가는 소수의 직업을 갖기 위해 전 국민이 경쟁하는 모양이 되어 버렸다. 조만간 생산인구까지 급격히 감소하게 되면 일자리 미스매칭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차별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지난 60년 동안 행해진 노동에 대한 왜곡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대한민국의 절대과제는 빈곤에서 탈출하여 선진국으로 빠르게 도약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노동은 경제성장을 위한 하위 파트너였고, 노동자의 기본권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때론 노동의 희생이 당연시되었고, 노동자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근면 성실한 사람이었다. 노동에 대한 왜곡과 노동자에 덧씌워진 이데올로기는 여성, 청년,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자연스럽게 정당화해 왔다. 어쩌면 한국사회가 직면한 이상한 노동시

장은 노동을 왜곡한 결과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선진국들은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구체적인 방법이 학교에서의 노동교육이었다. 노동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바람직한 직업관을 갖게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였으며 궁극적으론 민주시민으로 양성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었다.

이번 호 기획특집에서는 독일, 영국, 프랑스의 노동교육을 살펴보았다. 독일의 노동교육은 체계화된 '노동학'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직업교육과 연계하고 있다. 노동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존중이 있기에 독일은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노사관계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영국은 노동교육을 중요한 시민교육으로 간주한다. 영국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노동교육을 필수 교과과정으로 지정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노동조합도 학교 노동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미래 조합원이 될 학생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프랑스의 노동교육은 더욱 흥미롭다. 노동교육이 독일이나 영국처럼 하나의 교과목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시민교육, 역사지리, 경제사회 등 여러 과목에 그 내용이 충분히 융합되어 있다. 교과서를 분석해 본 결과, 시민교육 과목에서는 노동교육의 이론적 측면을 배우고, 역사지리 과목에서는 노동운동의 역사적 발전을 학습하며, 경제사회 과목에서는 노동과 경제의 균형을 이해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노력이 프랑스를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우아하게 잘사는 나라로 만들었다.

해외사례로부터의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첫째, 주요 선진국의 노동교육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모두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노동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에서 출발하여 그 내용을 발전·심화하는 형태로 교과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는 노동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를 배우고, 중학교에서는 노동법, 정치적 참여, 파업권, 노동의 역사 등에 대해 학습한다. 고등학교에서는 노사관계와 사회보장제도 등을 배운다. 이렇듯 오랜 시간 동안의 체계적인 교육은 노동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갖도록 만든다.

둘째, 유럽의 선진국들은 노동교육을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다. 시민교육과 노

노동교육의 관계는 독일처럼 노동교육을 더 강조하기도 하고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시민교육을 노동교육에 비해 더 강조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노동교육은 시민교육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시민교육은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 올바른 시민의식의 함양, 다른 나라에 문화에 대한 이해, 다른 사람과 공존하며 살아가기 등을 강조하는데, 이는 노동에 대한 존중과 노동자의 권리 인정, 대등한 노사관계와 협력적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

셋째, 노동조합도 학교 노동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노총은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학교 투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법,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대한 이해, 노동조합의 역할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교육비용을 직접 부담하며 지역본부가 지역별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노총(TUC)도 ‘노동조합이 학교 안으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노동조합의 역사, 노동조합의 필요성, 노동조합의 다양한 활동 등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다. 강사는 노동조합 조합원들로 특별교육을 받은 후에 학교 노동교육에 투입되고 있다.

선진국의 노동교육 사례는 한국에 많은 울림을 준다. 무엇보다 노동교육을 통해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려는 사회적 노력이 인상적이다. 최소한 선진국이 될수록 노동에 대한 배제와 왜곡이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선진국의 노동교육 사례를 통해 우리도 학교현장에서 노동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도록 가르친다면 지금의 편향된 직업선택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시장 내 차별을 줄일 수 있다. 노동교육을 통해 노동조합의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지금의 노사관계도 훨씬 성숙될 수 있다. 제대로 된 노동교육은 일터에서의 인권침해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문제는 한국의 노동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 동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인데, 답은 노동교육의 체계화를 향한 정부와 국민의 의지이다. **KLI**